

後進國에 있어서의 內資의 調達과 그 産業別 配分

(其 一)

朴 喜 範

目 次

序 論

1. 內資調達에 關한 基本定理
2. 非生產的 蓄積性向의 近代化
— 制度改善의 問題
 - a. 土地兼併性向의 止揚
 - b. 前資本主義의 高利貸性向의 止揚
 - c. 株式의 公開과 證券市場
 - d. 後進國의 混合經濟體制下의 資本調達機構
3. 追加貯蓄의 生産的 調達—政策의 問題
 - a. 對中產階級政策
 - b. 農業生産性의 增大
 - c. 零細貯蓄—國債是非
4. 結 論

序 論

경제학은 흔히 資源의 配分에 關한 學問이라고 정의된다. 그런데 資源의 配分過程은 첫째 物的 資源을 「調達」하고 人的 資源을 動員 乃至 訓練하는 過程이 선행하여야 하고, 둘째로 이렇게 하여 調達 내지 可用狀態에 있는 資源이 그 合理的 利用을 위해 最適의 産業部門 간에 「配分」되어야 하며, 셋째로 配分된 資源이 주어진 與件 아래 最適의 生産能率을 유지해야 함은 물론 投下된 資源의 신속한 廻轉이 가능 하게끔 合理的으로 「管理」되는 過程이 뒤따라야 한다. 말하자면 경제학은 國民經濟의 觀點에서 본 資源의 調達과 配分 그리고 그 管理에 關한 學問이라 할 수 있다. 모든 經濟決定이 私有財產制를 배경으로 하는 利己의 動機와 價格의 媒介機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古典派의 市場經濟를 가정하는 限, 資源의 調達過程은 配分過程에 附隨되는 不可分離의 자동적 過程이고, 投下資源의 管理活動은 私經濟的 經營活動으로서 本질적으로 經營學의 領域에 귀속시킬 수 있는 만큼,

경제학을 資源의 配分에 關한 學問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그러한 與件下의 資源의 配分過程은 價格機構 즉 相對價格의 變動에 대응하는 個個의 經濟單位의 限界의 選擇活動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러한 體制가 充分한 機能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資源의 可動性은 물론 資源의 可分性을 前提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本질적으로 資源의 可動性이 不完全하다거나 資源의 不可分性이 介在하는 限 自動的인 資源의 配分機構로서의 市場經濟는 그만큼 硬直性을 띠게 마련이다. 그러나 대체로 産業이 근대적 基盤을 가추고 있을뿐 아니라 人的·物的 資源의 完全可動性和 資源의 不可分性이 本질적인 問題로 대두하지 않는 先進經濟에 關한 限 限界의 選擇活動은 대체로 資源의 最適의 配分을 保障할 것이므로, 價格體系의 硬直化에서 오는 矛盾이 대두한다 하더라도 政府의 巨視的인 補完의 政策만으로 問題는 해결될 것이다. 따라서 선진경제는 成長經濟學의 觀點에서 볼때 量 즉 GNP의 限界의 變化를 특징으로 하며, 政策的 觀點에서 보면 政府의 財政의 내지 貨幣의 操作을 통한 誘導的 및 補完의 政策을 本源의 政策手段으로 한다. 그러나 問題를 長期의 觀點에서 관찰하고 生産性의 提高라는 本래의 成長概念에서 판단할 때 과연 이러한 단순한 補完의 政策手段이 本래의 使命을 다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疑問이 있고, 그것이 또한 오늘날의 成長經濟學의 主要課題이기도 하다.

後進經濟로 視點을 돌릴 것 같으면 問題의 性格은 判異하다. 傳統的인 富의 原始的 蓄積, 말하자면 富의 再分配를 특징으로 하는 非生產的 蓄積이 지배적 經濟활동으로 나타나는 前近代의 經濟基盤과 資源의 完全可動性을 阻害하는 近代의 經濟機構의 未備가 주어진 經濟與件으로 되

어 있는 후진경제에서는 資源의 配分過程이 자동적인 資源의 調達過程을 수반하는 不可分離의 單一過程으로 前提될 수는 없는 일이다. 物的資源에 관해서 보면 調達된 資本은 生産的 産業部門에 投下되어 國民生産力을 높일 수 있는 固定資本으로 化하는 것이 아니고, 貨幣資本의 形態 그대로 流通過程에서 富의 再分配를 통한 原始的 蓄積을 위해 投下된다. 人的 資源에 관해서 보면 無知와 未熟練 그리고 家族勞動을 특징으로 하는 후진경제에서는 限界的 選擇活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후진경제를 對象으로 하는 限, 경제학 그 자체를 資源의 調達과 配分을 자동적인 單一過程으로 보는 資源의 配分에 관한 學問이라고는 규정할 수 없다. 그리고 成長經濟學的 觀點에서 볼 때 후진경제는 資源의 調達과 配分 그리고 그 管理의 諸過程을 合理的으로 연결하는 經濟構造의 近代化過程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따라서 선진경제 처럼 貨幣所得의 단순한 量的 成長이 문제가 되지 않고 構造的 變化 즉 近代化過程의 進行與否가 문제된다. 이를 政策的 觀點에서 보면 대부분의 投下資源이 私의 利潤動機에 의하여 管理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더라도, 資源의 調達과 配分過程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投下資源의 廻轉率을 높일수 있는 制度의 改善과 보다 積極의 이고 직접적인 貨幣의 내지 實物的 政策手段이 요청된다.

이를테면 資源의 調達 및 配分이 자동적인 單一過程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與件이 造成되지 못하고, 각각 別個의 독립된 目的과 判異한 活動樣式을 가질뿐 아니라 工業資源의 管理마저 原始的 蓄積의 元本인 商業資本의 調達手段(産業資本의 商業資本으로의 逃避)으로 알고 있는 후진경제는 그러한 落後된 經濟構造를 近代化하는 데 보다 큰 政策的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 近代의 經濟與件의 造成이야 말로 후진국이 飛躍段階로 들어갈 수 있는 前提條件이라 할 수 있다. 이 小論에서는 이러한 見地 아래 주로 工業化를 위한 內資의 「調達」과 「配分」 및 그 合理的 「管理」에 관해 韓國의 實情을 土臺로 分析·檢討하면서 후진국 경제개발에 관한 基本課題를 해명코자 한다. (이번에는 內資調達問題만을 다룬다.)

1. 內資調達에 관한 基本定理

Kenneth K. Kurihara 教授는 그의 一論文에서 Nurkse 教授와 Robinson 女史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資本蓄積은 물론이지만 投資「需要」의 因果的 重要性을 강조하면서 動態經濟學的 立場에서 低開發經濟를 다루기 시작』하였음을 지적하고, 『資本의 成長이 古典派 經濟學者들이 믿고 있었던 것 처럼 消費를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인지, 혹은 Keynes 가 가르켜 주듯이 同時的인 消費增加없이는 불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Nurkse가 그랬듯이 消費에 變動이 없어도 가능한 것인지는 논의될 餘地가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다. (註1) 「投資需要의 因果的 重要性」에 관한 문제는 다음機會에 論議하겠지만, 資本成長에 관한 古典派, Keynes 및 Nurkse에 관한 견해는 확실히 논의될 餘地가 충분히 있다. 후진경제에 관해서 말하는 限, 단순히 消費를 감소시킨다 해서 그만큼 資本形成이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貧困한 나라에서는 새로운 所得源泉의 開拓없이는 同時的 消費增加가 불가능할뿐 아니라 限界消費性向이 극히 높다 하더라도 投資需要 그 자체를 誘發하지 못하며, 그리고 설혹 農村의 擬裝失業이 都市로 移動한 만큼 農業으로부터 實物資本이 蓄積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생산적인 工業資本으로 誘致할수 있는 市場機構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 후진국에서는 가장 가난한 社會階層인 小作人이 사실상 그들의 全生産物價値의 40 乃至 50퍼센트를 地代形態로 貯蓄하여 사실상 消費節約의 限界點에 도달하고 있으면서도 國民經濟 全體로서는 資本增加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地代形態로 蓄積된 貨幣資本은 다만 土地兼併 혹은 그밖의 非生産的인 虛飾的 消費(權威와 因習의 傳統을 유지하기 위한) 등을 통해 富 및 所得의 再分配가 이루어질 뿐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動亂의 餘波도 加勢했지만, 政府豫算上의 社會政策費의 累增을 통하여 사실상 同時的 消費增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엔겔係數」가 높고 需要 그 자체가

(註1.) Kenneth K. Kurihara, The Keynesian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59, P.21.

극히 單調로운 所得彈力的 性格을 띠기 때문에 다만 傳統的 産業인 農産物加工業(綿紡織 製粉 製糖 釀造業)등의 現代化를 촉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産業全體에 미치는 連鎖効果는 커녕 美剩餘農物에의 依存度를 높였고, 雪上加霜으로서 傳統的 産業의 現代化로 말미암은 「매뉴팩처」의인 종래의 傳來的 中小企業의 淘汰때문에 失業의 累増과 社會政策費의 増大要因을 造成하였다. 그리고 農業의 擬裝失業은, 美剩餘農産物과 歷代政府의 殊렬한 物價政策에 基因한 農·工産物간의 交易要件의 變動으로 말미암아, 農業을 버리고 都市에의 集中化現象을 나타냈다. 그뿐아니라 土地改革에 의한 地價償還 및 穀物の 政府買上등 사실상 農民은 貯蓄을 많이 하였지만 工業은 일어나지 않았고 다만 擬裝失業을 都市에 있어서의 用役의 擬裝失業으로 變形케 했거나 혹은 失業增加를 가져오게 했을 뿐이다. 분명히 말하면 古典派나 Keynes 및 Nurkse는 한결같이 資本의 調達(貯蓄)과 配分(投資)이 하나의 자동적인 單一過程으로 進行될 수 있는 市場機構를 前提로 하고 있으나 후진경제의 現實과는 距離가 멀다는 점이다.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Nurkse의 貧困의 惡循環이 후진국에게 주어진 鐵則이라고 한다면 아예 후진국의 경제개발은 立論의 餘地가 없다. 물론 Nurkse는 貧困의 惡循環을 이루는 여러 連鎖중 어느 하나를 打開해야 함을 인정하고, 消費水準의 低下를 수반하지 않는 農村擬裝失業의 吸收, 都市消費層의 誇示效果防止에 의한 消費節約 및 強制貯蓄등 資本調達源泉의 開拓과, 均衡成長論에 입각한 多部門開發을 통해 投資需要 그 자체를 마련함으로써 惡循環의 連鎖를 打開하기를 권고한다. (註2) 그런데 그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후진경제에서도 資本의 調達과 配分이 자동적인 市場機構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資本調達과 經濟成長의 可能性 그 자체가 아니고, 近代化된 市場機構가 없는 후진국에서는 資本의 調達過程과 配分過程을 最適成長을 위해 合理的으로 연결시키는 具體의 政策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註2) R. Nurkse,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Third Edition, Oxford, Basil Blackwell 1955)

후진국은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政策의 貧困」 때문에 가난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Harrod의 概念인 現實成長率(G)을 自然成長率(G_n) 만큼 높일 수 있을 정도의 資本供給, 즉 그러한 貯蓄函數를 가질 만큼 所得水準이 높으나 하면 그렇지 않다. 그러나 후진국은 小作制度나 高利貸에 있어 榨取率(率)이 높기 때문에 所得과의 相關關係에서 볼 때 선진국보다 資本調達可能性이 높으며 따라서 이러한 中間榨取에 의해서 얻어지는 原始的 蓄積을 産業資本化할 수 있는 政策의 手段만 올바르게 강구된다면 餘他の 事情에서 중대한 障礙條件이 없는 限 후진국은 능히 貧困의 惡循環을 탈피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진국에 있어서의 資本調達에 관한 基本的 諸課題의 첫째는 전혀 相異한 動機에 의하여 獨立의으로 進行되는 資本調達過程과 資本配分過程의 單一化를 통해 傳統的인 非生産的 蓄積性向을 生産的 性向으로 전환케 하는 市場機構의 近代化 즉 『制度의 改善問題』이며, 둘째는 近代의 經濟與件의 造成 및 政策의 刺戟에 의한 追加貯蓄의 生産的 吸收를 목표로 하는 『政策의 問題』이다. 이를 간단히 定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定義에 따라서 「現實資本形成率」은 事後的으로 投資와 貯蓄이 「이콜」하는 貯蓄率을 뜻한다. 그런데 「現實貯蓄率」은 事後的으로 貯蓄과 投資가 「이콜」하는 水準이 아니고, 投資 아닌 非生産的 支出을 위해서 使用되는 貯蓄分을 포함한 總體의 貯蓄率을 말한다. 非生産的 支出에는 土地兼併 高利貸 그리고 在庫投資 不動産投資 및 그 밖의 投機를 위한 支出이 포함된다. 生産에 寄與하는 限 高利貸가 非生産的 投資가 아니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長期的 觀點에서 보면 실록 그것이 工業등 生産的 産業에 投下된다 하더라도, 固定資本化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그 産業으로부터 逃避할 性格의 資金일뿐 아니라, 利子支拂過程은 産業資本이 高利貸資本으로 移轉하는 過程을 의미하므로, 그 本質은 非生産的 投資이다. 在庫投資도 近代의 概念에 의하면 投資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在庫의 純增加는 곧 資本形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商業資本主義的 性格을 지닌 후진국에 있어서의 在庫投資의 지배적 形態는 단순히 流通過程의 延長을 의미하는 中間

榨取에 그 목적이 있다. 말하자면 선진경제에 있어서의 在庫純增加가 正常的인 경우 經濟與件의 變動으로 말미암은 受動的인 結果임에 비하여 후진국의 在庫投資는 積極的인 그리고 代表的인 原始的인 資本蓄積手段으로 登場한다. 따라서 이러한 活動은 何等 生産力의 增進을 가져오지 못하여 産業利潤과 消費者를 中間榨取하는 産業資本의 商業資本化 乃至 所得의 再分配過程을 뜻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本質的인 機能을 論外로 한다면 非生産的인 投資이다. 그런데 現實貯蓄率에는 「마이너스의 貯蓄」(negative savings)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純現實貯蓄率은 粗現實貯蓄率에서 「마이너스」의 貯蓄率을 割引해야 한다. 그리고 「마이너스」의 貯蓄率은 國民所得에 대한 政府豫算上의 社會政策費(狹義의 社會費用)의 比率로 代辯할 수 있다. 또 하나의 概念은 「社會的인 可能貯蓄率」 혹은 「社會的인 最適貯蓄率」이다. 近代의 經濟與件의 造成 및 政策的인 刺戟에 의하여 그 社會가 달성할 수 있는 追加貯蓄의 上限點을 말한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勞動力供給의 完全吸收(完全雇傭)가 가능한 Harrod의 自然成長率(G_n)을 충족해 주는 貯蓄率이라고 保障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때 貯蓄은 政府貯蓄과 民間貯蓄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으나, 政府貯蓄은 便宜上 以上에서 본 세계의 概念 즉 現實資本形成率 現實貯蓄率 및 社會的인 可能貯蓄率 속에 다같이 包含시킬 수 있다. 지금 GNP에 대한 比率로 표시하여 現實資本形成率을 A_r , 現實貯蓄率을 A_s , 「마이너스」의 貯蓄率(GNP에 대한 社會政策費 혹은 社會費用의 比率)을 N_r , 社會的인 可能貯蓄率을 S_p , 그리고 自然成長率을 충족시켜 주는 自然成長貯蓄率을 G_n 라고 한다면 후진경제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의 基本的인 不均衡 즉,

$$A_r < (A_s - N_r) < S_p,$$

그리고

$$S_p < G_n$$

으로 나타난다.

以上에서 본 諸概念은 貯蓄率을 문제삼았으므로 Harrod의 成長率 諸概念과 같지 않다. 그러나 이를 後者의 그것들과 比較하면 現實資本形成率 A_r 은 Harrod의 現實成長率 G , 現實貯蓄率 A_s 은 保證成長率 G_n , 그리고 社會的인 可能貯蓄率(最適率) S_p 은 自然成長率 G_n 과 對比할 수 있다.

그런데 先進經濟에 있어서의 基本的인 不均衡은, 不況期에 있어서는

$$G < G_n$$

그리고

$$G < G_n$$

으로 나타나며 完全雇傭이 달성된 오늘날의 西歐諸國과 같은 好況期에 있어서는

$$G < G_n$$

그리고

$$G = G_n$$

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不況期에 있어서는, 첫째로 企業家들이 滿足하는 保證成長率 水準에 있어서의 貯蓄函數(貯蓄表)가 現實成長率 水準의 貯蓄供給(事後的으로 投資와 貯蓄이 「이콜」하는)을 凌駕하는 만큼 資本過剩狀態에 있지만, 둘째로 雇傭面에서 現實成長率이 勞動力供給能力을 의미하는 自然成長率보다 낮아 失業이 있으므로, 資本의 生産性을 無視하여 그야말로 廢炭坑에 銀行券을 묻고 그것을 都會地의 쓰레기로 채운後 다시 個人企業으로 하여금 그것을 파내게 하는 浪費的인 公共事業을 전개하는 것 조차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결론이 나온다(註3) 왜냐하면 단순한 貨幣支出밖에 의미하지 않는 公共事業이라 하더라도 餘他 産業에서 乘數效果로 말미암은 誘發投資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適正雇傭에 도달한 好況期에 있어서는, 이미 現實成長率이 雇傭面에서 自然成長率과 거의 일치하나, 企業家들이 滿足할 수 있는 保證成長率下의 貯蓄函數가 여전히 事後的으로 投資와 貯蓄이 일치하는 現實成長率下의 貯蓄供給水準을 凌駕하여 資本過剩을 露呈할 수도 있는 만큼, 한편에서는 農業 및 用役等 比較的인 勞動力集約的인 産業의 勞動力生産性을 높임으로써 剩餘勞動力을 造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資本의 深化를 꾀하여 G_n 를 G 와 「이콜」시키는 政策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賃金 「인플레이션」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

후진경제의 基本的인 不均衡에 관해서 보면, 現實資本形成率 A_r 은 마찬가지로 投資와 貯蓄이 「이콜」하는 事後的인 의미에 있어서의 貯蓄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그 貯蓄은 現實貯蓄 중 후진

(註3) J.M. Keynes, The General Theory, P. 129.

국에서 가장 典型的인 非生産的 資本增殖을 위해 흘러가는 대부분의 貯蓄分을 除外하고, 近代의 의미에 있어서의 生産的 投資(新工場 新開墾 新住宅 社會資本의 擴充 在庫의 純增加등)로 充당된 貯蓄分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마이너스」의 貯蓄, 즉 그것을 더욱 單純化한 社會政策費 혹은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社會費用을 現實貯蓄額에서 控除하더라도 現實資本形成率은 現實貯蓄率보다 낮다. 왜냐하면 첫째로 후진국의 傳統的이고 代表的인 蓄積性向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단순한 富 및 所得의 再分配過程을 뜻하는 原始的 蓄積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다 많은 貯蓄분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支出되기 때문이고, 둘째로 「마이너스」의 貯蓄인 社會政策費는 이미 現實資本形成率에도 「마이너스」의 要素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純現實貯蓄率($A_{r,} - N_{r,}$)은 후진국적인 『傳統的 蓄積性向을 충족시켜 주는 의미』에서 企業家나 資本家들이 滿足하는 후진국적 保證成長率下에 있어서의 『貯蓄函數에 가깝다. 이런 경우의 蓄積性向(propensity to accumulate)이란 近代의 概念이 말하는 限界概念($\Delta S/\Delta Y$)이 아니고 Smith가 말하는 交換性向과 같은 일종의 社會的 習性を 뜻한다. (註4) 社會的 可能貯蓄率은 어느 의미에서나 Harrod의 自然成長率을 충족시켜 주는 自然成長貯蓄率과 다르다. 經濟制度의 近代化 및 適切한 經濟政策으로 現實貯蓄率을 높여 이를 生産的 投資로 誘導함으로써 可能한 후진국의 貯蓄能力의 限界를 뜻한다. 따라서 그것은 그나라의 國民性 그리고 經濟的 政治的 및 社會的 與件, 특히 그 經濟體制와 指導者의 「리더십」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진경제의 기본적 不均衡은 $G_0 > G_n$ 傾向에 있고, 이러한 傾向은 慣性的 失業問題를 대두케 한다. (註5) 왜냐하면 $G_0 > G_n$ 의 不等式이 存續하는 限에 있어서의 한편 利潤採算이 맞는 投資機會의 不足으로 말미암아 長期停滯를

(註4) A. Smith, The Wealth of Nations, P. 15. A. Smith는 人間은 本來 交換「性向」(the propensity to truck, barter, and exchange)을 가지며 그것이 分業의 根源을 이룬다고 말한다.

(註5) R. Harrod, Towards a Dynamic Economics, 1948. P. 91.)

모면할 수 없고, 다른 한편 資本過剩이면서도 大量失業이라는 先進資本主義的 矛盾이 存續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진국에서는 비록 現實資本形成率을 社會的 可能貯蓄率까지 提高($A_{r,} = S_{p,}$)하고 이를 모조리 生産的 投資로 轉換하여 雇傭을 느린다 하더라도 勞動力供給率을 뜻하는 自然成長率과 「이퀄」시킬 可能性은 거의 없다. 말하자면 貯蓄能力이 完全雇傭에 필요한 貯蓄을 따르지 못하는 것(즉 $S_{p,} < G_{r,}$)이 대부분의 후진국의 특징인 것이다. Nurkse 教授의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말은 이런 의미에서라면 妥當性을 갖는다. 그러나 후진국의 낮은 社會的 可能貯蓄率이 흔히 말하는 「貧困의 惡循環」을 벗어날 수 없게 한다는 뜻이라면 不當하다. 오히려 후진국은 이런 뜻에서는 「政策의 貧困 때문에 貧困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體質에 알맞은 資本調達機構의 缺如乃至 未成熟에 貧困의 惡循環이 깃든다고 할 수 있다.

修正資本主義的 선진경제는 資本調達과 資本配分이란 經濟的 諸機能을 自動的인 單一過程화하는 市場機構를 가지며 政府가 기본적 不均衡만을 補完하는 混合經濟體制를 이룬다. 社會主義經濟는 그 體制에 독특한 資本調達機構를 가지는 동시에 經濟計劃에 의하여 政府가 일정한 목표아래 綜合的인 資本配分機能을 직접 담당한다. 자본주의 체제를 갖는 후진경제는 선진경제와 같은 合理的인 單一過程으로서의 市場機構를 가지지 못하거나 실사 市場機構를 가진다 하더라도 傳統的 蓄積性向을 충족시킬뿐 오히려 經濟成長을 阻害하는 落後된 機構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후진국에서도 資本調達과 資本配분이 하나의 自動的인 單一過程으로서 이루어지는 市場機構가 성숙될 때까지는 선진경제의 補完的性格에서 벗어나 후진국 특유의 資本調達機構를 造成하고 資本配分機構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메카니즘」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훌륭한 投資計劃을 가지면서도 그것이 上空空論이 되고 마는 것이 일수이다. 이와같은 機構의 造成은 곧 후진국 자체의 政策體系와 直結된다.

그러면 資本配분에 관한 문제는 다음 機會로 미루고 후진국의 資本主義的 資本調達機構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한 마디로 말해

서 이 문제는 落後된 半封建的 乃至 商業資本主義的 資本流通機構를 近代의 產業資本調達機構로 止揚하는데 그 焦點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후진국에 있어서의 資本調達策의 基本課題가 아닐 수 없다.

2. 非生産的 蓄積性向의 近代化 —— 制度改善의 問題

가장 중요한 기본적 課題인 『制度의 改善』은 現實資本形成率 $A_{r,}$ 과 純現實貯蓄率 $(A_{r,} - N_{r,})$ 간의 기본적 不均衡을 均衡化하는 문제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미 非生産的인 富 및 所得의 再分配過程을 통하여 蓄積되어 있는 民族資本과 앞으로 그러한 蓄積性向에 의하여 계속 非生産的인 投資로 흘러갈 資本을 產業資本化하기 위한 資本調達機構의 改善策이다. 이러한 措置에 의하여 조달될 產業資本은 國民 個人에게 결코 현재 이상의 耐乏을 강요하는 追加貯蓄이 아니다. 다만 蓄積된 資本의 非生産的 循環過程을 生産的 循環過程으로 轉換시키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政策의 課題는 制度改善의 問題로 歸着되고 만다.

(a) 土地兼併性向의 止揚

農業을 爲主로 하는 傳統的 社會에서는 致富의 代表의 手段이 土地兼併이다. 따라서 現實貯蓄의 많은 몫이 단순한 所有權移轉에 불과한 土地兼併으로 흘러가며, 아무런 生産的 寄與를 하지 않는다. 만일 이러한 資本이 資本形成에 貢獻하는 方向으로 投資된다면, 現實資本形成率과 純現實貯蓄率간의 乖離는 대폭 좁혀질 것이며, 후진국이 貧困의 惡循環에서 벗어 날 수 있는 始動力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데 土地兼併의 經濟的 效果는 두가지 側面에서 고찰될 수 있다.

첫째는 후진국에서 가장 貧困하다고 할 수 있는 小作人이 그들의 實質所得의 40 乃至 50퍼센트를 貯蓄하여 地代라는 名目으로 地主에게 支拂하지만, 地主는 그것을 대체로 土地兼併을 위해 支出하거나, 地主로서의 權威를 위한 因習的인 虛飾消費 그리고 그를 둘러싼 非生産的인 많은 家族 및 親知의 扶養을 위해 消費한다. 地主가 거의 土地兼併이라는 蓄積手段에만 執着되는

理由는 낡은 因習, 특히 儒敎文化圈에서는 직접 生産活動에 참여하는 것을 威信의 損傷으로 생각하는 因習도 있겠지만, 土地兼併이 가장 安全한 蓄積手段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설혹 近代적 產業投資를 의욕한다 하더라도 그 자신 그것에 필요한 知識과 經驗이 없고, 또 社會的 協同과 對人信用이 稀薄한 후진사회에서 單獨으로 生産的 事業을 營爲하자면 祖上으로부터 이어 받은 全土地資產을 投入하지 않을 수 없는 冒險을 敢行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近代的 產業을 單獨으로 經營하기엔 不足한 年年의 追加貯蓄으로 資本增殖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土地兼併 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株式投資에 대해서는 우선 利潤率이 地代보다 有利하지 못할 뿐더러 自己資產을 自己가 직접 管掌하지 않고서는 自己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만큼 社會的 協同에 대한 經驗이 없기 때문에 人氣가 없다.

둘째로 만일 土地兼併을 禁止하는 手段이 政府에 의하여 강구되면 地主階層의 虛飾的 消費와 地主를 圍繞한 많은 非生産的 社會階層이 生計手段을 잃게 될 것이므로 그만큼 社會政策費가 累增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이다. 확실히 그들의 所得源泉이 萎縮되는 것은 사실이므로 社會政策費로서 負擔될 몫은 생각하기 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에게 勤勉과 正常的인 生活態度를 강요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生産力提高에 간접적으로 寄與하게 될 機會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土着 土地資本을 產業資本化하는 具體的 政策手段은 土地改革이다. 앞에서 지적한 여러가지 要因때문에 經濟誘因에 呼訴하여 地主의 追加貯蓄을 產業資本으로 전환하기는 매우 곤란하기 때문이다. 19世紀 후진국의 產業資本形成에 있어서도 土地改革은 하나의 先行條件이었고, 또 土地資本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能率的으로 工業資本化하느냐 못하느냐의 與否가 產業資本形成의 成敗를 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社會主義的 開發模型에 있어서도 그 原理는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農業을 위주르하는 傳統的 農業國家가 工業化하자면, 主要 資本調達源泉이 農業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工業化過程이 진행됨에 따라 늘어가는 食糧需要와 原料需要의 增加는 農業의 生産性向上과 農業部門으로부터의 貯蓄供給 없이는 불가능하다.

19世紀에 있어 土地改革 즉 農業革命이 資本調達面에서 工業化에 가장 정상적으로 寄與한例는 1807年의 第1次 勅令으로부터 시작되어 1950年代까지 서서히 進行된 獨逸의 土地改革이었다. 地代銀行 (Retenbank) 이 발행한 地代狀 (Retenbrief)이 工業化過程에서 膨脹되는 貨幣需要를 應答하기 위해 한동안 通貨로서 流通되었던 것과 같은 特殊事情을 論外로 한다면, 그 進行過程의 單純模型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地代銀行으로 하여금 土地改革의 對象이 될 農地에 대해 地代狀을 발행하여 이를 地主에게 交付하고 農奴는 地價를 地代銀行에 年賦로 上환케 하였다. (註6) 地主는 대체로 그 地代狀으로 證券市場에서 새로 設立되는 企業의 株式과 交換하였고, 企業은 地代銀行으로부터 資金을 供給받을 수 있었다. 地代狀이 거의 完전한 通貨로서 일정한 期間市中에 流通될 수 있었기 때문에 地主의 一時拂에 의한 地價償還 要求와 農奴의 年賦拂간의 「타임·택」은 多幸히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처럼 土地改革을 통해서 獨逸의 土地資本은 工業資本으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效果가 있다. 그 하나는 傳統的인 非生産的 蓄積性向을 生産的 蓄積性向으로 전환케 하는 近代의 資本調達機構 確立의 轉換點이 된 점이고, 다른 하나는 工業化에 필요한 貨幣資本과 實物資本을 크게 農業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점이다. (註7) Marxist들은 남은 榨取階級인 地主를 새로운 榨取階級인 資本家로 바꾸어 놓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資本主義의 開發模型으로는 달리 道理가 없다. 사실상 社會主義의 開發模型은 政府에 의한 農民收奪이 中央集權的 計劃當局의 任意的 決定으로 말미암아 前者의 그것보다 더욱 甚하다고 할 수 있고, 오히려 尤甚하기 때문에

(註6) 19世紀 前半期の 獨逸의 地代銀行과 第1次大戰이후의 地代銀行과는 전혀 性格이 相異하다. 前者는 土地改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設立되었으나, 後者의 그것은 戰後의 通貨膨脹을 방지하기 위한 機構였다.

(註7) 石濱知行 著 獨逸經濟史 (改造社版 各國經濟史) 448~451面

19世紀 후진국의 正常的 資本形成率이 GNP의 15乃至 20퍼센트인데 (註8) 비해서 戰後 社會主義陣營의 東歐諸國의 그것이 25乃至 35퍼센트 (註9)에 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戰後 東南亞諸國의 土地改革을 보면 1950年代의 「파키스탄」의 第一次 土地改革과 印度의 土地改革은 失敗로 돌아간 것으로 傳하여지고 있다. 흔히 土地改革의 失敗는 그 改革에 의하여 調達된 資本을 工業으로 吸收할 수 있는 工業化計劃의 未備와 既存 地主勢力으로부터의 政治的 壓力에 基因한다. 다만 臺灣의 土地改革은 그들의 3次에 걸친 4個年 計劃에 대한 큰 資本供給源泉을 이룰 수 있었다. 그들은 地主에 대해 地價의 一部를 既存 公共企業의 株式으로 支拂함으로써 地價償還을 工業資金으로 轉用할 수 있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過去의 土地改革을 回顧해 보자. 1949年 6月の 農地改革法의 公布와 1950年 4月 同施行細則의 公布를 통해서 사실상 韓國動亂중에 土地改革의 實施를 보게 되었다. 그 內容을 보면 南韓의 全耕地面積 約 207萬町步 중 重要分配農地 約 60萬町步를 小作農家 526千戶 自小作農 中 50퍼센트인 511千戶 都合 1,037千戶에 分配할 計劃이었다. 地價의 策定은 主生産物의 平年作 生産量의 150퍼센트를 基準으로 하였다. 償還方法은 政府가 小作人으로부터 實物 배이스에 의하여 5年賦拂로 償還받고 地主에 대해서는 역시 政府가 5年均分年賦로 每年 額面農産物의 法定價格 (主生産物의 政府買上價格=거의 時價의 50퍼센트 程度였음)에 의하여 貨幣로 支拂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地價償還을 통해 土地資本을 産業資本化할 목적으로 日帝로부터 물려받은 歸屬財産의 賣却에 地主의 參加機會를 優先적으로 부여하기 위하여 歸屬財産處理法에도 考慮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動亂으로 인한 物價暴騰도 하나의 原因이 있지만 歸屬財産의 拂下자제도 政治的 弄絡과 緣故權이 있는 個人本位의 拂下方式을 취했기 때문에 零細地主의 參加機會가 사실상 없었

(註8) P.P. Streeten, Unbalanced Growth, Oxford Economic Papers, Vol 11, June 1959, P, 167.

(註9) UN, Economic Survey of Europe, 1959. Chapter II 東歐諸國의 成長率을 參酌해 보라.

다. 株式參與의 경우도 直接 經營參與者들의 「인플레」 利得 이외에 實際 事實상의 收益이 있었다 하더라도 正常的인 經理가 아니었기 때문에 形式上 언제나 利潤配當없는 赤字運營인 企業體의 株式이 그들에게 興味の 對象이 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1951年의 例를 보면 地主에 대한 政府의 年間 要償還額이 1,000億圓에 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歸屬財產 拂下 豫定總額은 300億에 불과하였다. 이리하여 地價의 95퍼센트가 소위 地主의 生計費에 充당되는 現金支拂이 있으며, 그것조차 果敢的 「인플레」 때문에 地價證券의 年賦支拂을 기다리는 일이 없이 額面價格의 50퍼센트 程度로 市中에서 投資되고 말았다. 그리고 歸財拂下에 利用된 地價證券도 事實에 있어서는 「뿌로오코」나 歸財를 拂下받을 사람 자신이 市中에서 額面の 50퍼센트로 買收한 것이었기 때문에 地主는 거의 그 拂下에 參與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土地改革은 地主를 「알거지」로 만든 代身 消費購買力 果實에 의한 「인플레」를 助成하였고 高利貸金業者의 投機機會를 提供하였을뿐 아무런 成果도 없었다. (註10)

(b) 前資本主義의 高利貸性向의 止揚

조달된 후진국의 부족한 貨幣資本이 그나마 高利貸 및 不動產投資 또는 非生產的 流通過程으로 흘러가는 傳統的 蓄積性向을 그대로 放置하고서 工業化에 필요한 새로운 資本源泉을 개척한다는 것은, 마치 土地兼併性向을 그대로 溫存하면서 工業化資本을 전혀 새로운 源泉에 依存하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그러한 非生產的 蓄積性向도 止揚되어야 할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高利貸는 첫째로 消費金融에 利用되는 高利貸와 生産金融에 利用되는 高利貸 및 商業金融에 利用되는 高利貸로 大別할 수 있다. 이는 그 資金의 經濟的 機能을 표준으로 한 區分이다. 둘째로 地域別 對象者를 기준으로 區別하면 農漁村高利貸 및 都市高利貸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生産金融 및 商業金融에 이용되는 高利貸도 後進國의 특징 및 長期的 觀點에서 볼때 非生產的 蓄積過程 즉 所得 및 富의 再分配를 의미하는 原始的 蓄積過程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미 지극한 바와 같다.

먼저 生産金融에 이용되는 生産者高利債에 대한 해결책부터 고찰해 보자. 生産企業體다 하더라도 그 規模에 따라 자연 해결책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株式을 證券市場에 上場할 수 있을 정도의 大企業의 高利債라면 轉換社債를 생각할 수 있다. 일정한 條件과 期間에 私債를 株式으로 轉換케 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도 當事者간의 自由契約에 放任하고 보면 實効를 얻을 수 없을 것인즉, 政府의 強力한 뒷받침과 이에 필요한 法의 制定이 요청된다. 中小企業의 高利債도 合資形式의 直接 企業參與를 政策的으로 유도하는 것이 賢明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것에 限해서는 일정한 金融機關 (例를 들면 臺灣의 產業開發信託公司 혹은 파키스탄의 產業開發公社)을 設立 혹은 既存機關으로 하여금 代行業 함으로써 貨幣資本의 非生產的 流通過程을 金融機關을 媒介로 하는 生産的 流通過程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역시 이를 위해서는 高利債整理에 필요한 細密한 諸措置와 補完政策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消費金融에 이용되는 高利債整理 問題이다. 消費者高利債는 완전히 非生產的이며 典型的인 후진국적 原始蓄積이기는 하나 消費金融 그 자체는 필요한 機能이다. 따라서 消費者高利債를 整理하여 이를 일정한 金融機關 혹은 産業開發「센터」에 「몰」化하여 經濟開發에 利用함으로써 原始的 蓄積性向을 止揚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商業銀行 혹은 庶民金融機關으로 하여금 종래 高利債가 담당했던 機能을 代行業 할 수 있게끔 消費金融에 대한 信用制限을 대폭 緩和하는 등의 補完政策이 뒤따라야 함은 生産者高利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세계로 商人高利債의 産業資本化 措置도 前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原始的 蓄積性向을 止揚할 수 있는 일이지만, 商業銀行의 商業信用에 대한 制限緩和는 消費者高利債整理 이상의 중요성을 띠게 된다.

다시 말하면 轉換社債 및 合資形式의 直接 企業參與 이외의 모든 高利債는 土地改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형 産業開發公社에 集中시켜 債權者에게는 5個年計劃事業의 株式 혹은 産業開發公社 그 자체의 株式을 交付하고 債務者로 부터는 元利金を 同公社에 年賦償還케 함으로써

(註10) 韓國銀行調查月報 1952年 1月號 PP. 43~46.

非生産的 貨幣資本을 産業資本化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措置에는 다음과 같은 補完措置가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로 生産金融 消費金融 및 商業金融할 것없이 과거 高利債가 담당해온 信用機能을 商業銀行 中小企業銀行 農協 및 庶民金融機關등이 代行할 수 있게끔 信用制限을 그만큼 緩和해야 할은 위에 지적한 바와 같다.

둘째로 債權者들에게 그 代價로 株式을 交付하는 경우 一時에 應할 수 있을만큼 企業이 한꺼번에 일어날 理 없다. 따라서 投資의 懷妊期間에 있어서는 한편 모든 生産資本에 대해 建設利子를 인정하는 동시에 整理對象 高利債의 債務者로부터는 未償還額에 대해 銀行利子を 附加하고 投資의 懷妊期間중이라도 整理對象에 든 債權者에게는 利潤이 支拂되어야 한다.

세째로 人的信用에 의한 私金融이 극히 중요한 經濟機能을 갖는만큼 小額의 高利債는 이를 整理對象에 넣어서는 안되며 또한 物的擔保때문에 銀行信用의 惠擇을 얻을수 없는 零細層에 대하여는 積金등을 통한 零細信用의 길을 터놓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高利債整理는 다음과 같은 效果를 갖는다.

첫째로 다음 節에서 論及하게 될 『政策의 問題』가 수반된다면 이러한 方式의 高利債整理는 原始蓄積性向을 近代의 蓄積性向으로 전환케 하는 「모멘트」가 된다. 이와같은 劃紀的 轉換點없이 후진국의 資本調達機構가 자등적으로 形成되기에는 너무나 오랜 時間이 필요한 것이다. 후진국의 經濟開發은 어느 면에 있어서나 質的 轉換에 있는 것이지만 단순한 量의 限界의 成長에 있는 것이 아니다. 自由放任에 의한 量의 限界의 成長을 기다려 가지고서는 언제까지나 貧困의 惡循環 특히 人口의 壓力을 克服할수는 없는 일이다.

둘째로 利子負擔 즉 資本費用이 輕減됨으로써 産業의 收益率이 上昇할 것인즉 만일 商業의 收益率을 減少시키는 租稅 및 그 밖의 價格政策이 수반된다면 貨幣資本은 商業 및 高利貸 위주의 原始的 蓄積으로부터 점차 生産的 投資로 指向하는 橋頭堡가 마련될 것이다.

세째로 이처럼 全面的 高利債整理와 그 補完策으로서의 信用緩和가 이루어지면 高利貸가 기준이 되는 후진국 특유의 高利現象에 終止符를 찍는 契機가 될 것이며, 銀行機能의 正常化를 통하여 후진국에서 生産의 가장 중대한 隘路가 되어 있는 高利子率을 어느 정도 低下시킬수 있을 것이다. 金融機構의 正常化 乃至 資本調達機構의 마련없이 銀行利子率만을 引下하려는 現在의 金融政策은 실질적인 效果를 견우기 어려울 것이며 실사 銀行利子率을 引下한다 하더라도 金利의 二重構造를 더욱 深化할뿐 問題의 本질적 해결이 되지 못할 것이다. 問題는 制度的要因이 아닌 資本의 稀少性으로 인한 相對的 高利子率水準까지 市場利率을 떨어뜨려야 한다.

네째로 만일 이렇게 하여 相當한 低利子率을 유지할 수 있고 高利貸 및 在庫投資를 주로 하는 原始的 蓄積이 止揚되어 대부분의 貨幣資本이 生産的 投資로 指向하게 되면, 商人에 의한 産業利潤의 中間搾取가 감소되어, 工業資本의 成長은 물론 消費大衆에게도 보다 값싼 財貨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韓國에 있어서의 高利貸 그리고 高利貸資金의 主要源泉인 「契」 문제에 대하여는 두 개의 論文이 있다. 하나는 李昌烈教授의 『私金融의 組織化를 提言한다』는 論文이고 다른 하나는 金三守教授의 많은 精力이 傾되된 貴重한 論文 『契의 諸學說의 吟味와 그 團體 概念에 關한 史的 研究』이다. 李昌烈 教授는 月1割의 高利를 받을망정 高利貸金은 그것이 가지는 「經濟的 機能」과 「資金形成을 圓滑하게 한다」는 두 가지 理由로 해서 高利貸金業者에게 「經濟功勞勳章」은 贈賞 罰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結論으로 이끌어 간다. 그 論文의 要旨는 처음 有力日刊紙 『東亞日報』에 發表되어 「선세이슌」을 일으킨 바 있었고, 당시의 政府施策을 맹목적으로 支持하는 御用理論이 虛된 根據에서 이를 反駁한 적도 있어 記憶이 새로운 바 있다. 확실히 李教授의 論文은, 당시 이들 高利貸資金을 産業資本化할 구체적 方案과 그 事後對策을 강구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高利貸만을 法的으로 抑壓하는 政府政策을 대상으로 하는 限 一理가 있는 이론이었다. 왜냐하면 만일 政府의 意圖대로 高利貸가 一掃되고

보면 低利의 銀行融資를 받을 수 있는 일부 特權企業層을 제외하고는 資本을 조달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李教授의 處方은 주어진 前資本主義의 經濟與件에는 迎合될 望 「飛躍」을 위한 本질적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오히려 金教授의 論文은 그 자체가 「史的 研究」이기 때문에 産業資本의 動員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마는 많은 示唆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指向點은 우리의 立場과 다를 바 없다. (註11)

그런데 1961年 韓國에서는 農漁村高利債에 局限해서 그리고 그중에서도 15萬圓以下 2萬圓以上の 消費金融에 局限해서 高利債整理가 있었지만 1949年度의 土地改革의 失敗를 되풀이 하고 말았다. 事前에 推定되었던 1,200億圓 乃至 1,600億圓에 달하는 農漁村高利債 總額과 540億 圓에 該當되지 않았으며 그것도 2年 據置 5年 賦拂로 債務者로부터 償還받아 現金으로 債權者에게 償還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最近에 와서 農業金融債券으로 전환하였다. 農業金融債券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本질적 政策變動을 수반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리고 一方 高利債를 整理하면서도 그 高利債가 담당해 온 消費金融에 대한 補完策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消費金融의 硬塞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만일 生産金融을 위한 것이든 消費金融을 위한 것이든, 그리고 15萬圓以上の 것이든간에 이를 網羅하여 整理對象에 넣고 農協을 통한 農業金融(消費金融포함)을 대폭 緩和하는 동시에 債務者에게 5年 賦拂로 元利金을 農協에 拂入케 하는 대신 債權者에게는 確定利潤이 붙는 農協에의 出資證書(株券)를 交付하였더라면 每年 政府가 莫大한 財政資金을 割愛하지 않을 수 없었던 農業金融의 負擔을 덜게 되었을 것이다. 農民은 보다 豊富한 資金惠澤을 받아 農業生産性を 높일 수 있었을 것이고 政府는 그만큼 財政資金을 보다 生産性이 높은 工業 혹은 電力開發에

(註11) 財團法人, 興韓財團經濟研究所刊, 「經濟論文集」第二輯, 李昌烈, 「私金融의 組織化를 提言한다」 1957年 8月.

淑明女大, 亞細亞女性問題研究所刊, 「亞細亞女性研究」第一輯, 金三守, 「契」의 諸學說의 吟味와 그 團體概念에 關한 史的 研究」 1962年 12月. 특히 P. 143 註 3

轉用할 수 있었을 것이다. 農協을 통한 消費金融까지를 緩和하여 高利貸에 의한 高率의 原始的 榨取性向을 止揚하자면 많은 基金이 필요할 것이고, 이 基金을 마련하자면 2萬圓以上の 모든 高利債를 整理對象에 포함시켜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1962年 6月 10日에 斷行된 通貨改革도 결국 失敗로 돌아갔다. 通貨改革은 여러가지 與件과 目的 특히 膨脹된 通貨量의 收縮必要性이 具備되어야 하기 때문에 通貨改革 그 자체가 産業資金調達策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工業化計劃이 시작되려는 후진국에서 通貨改革이 필요한 그밖의 與件이 成熟되어 있다면, 단순한 通貨量의 減縮 이상의 遊休 및 投機性資金의 産業資金化가 문제될 수 있다. 지난번의 通貨改革은 直前의 通貨量 3,400億圓중 이러한 非生産的投資의 潛在性이 있는 待機性資金 970億圓(97億圓)을 全面的인 封鎖解除가 있었던 7月中旬까지 封鎖하는데 成功했었다. 그러나 종래 特殊層에만 局限해서 融資業務를 許容해 온 市中銀行이 中小 生産者 및 商人을 포함한 一般大衆에 대한 信用調查가 未備했던 탓으로 政府는 一面 果敢한 待機性資金의 封鎖와 他面 果敢한 生産資金 및 流通資金의 融資를 피하였지만, 市中銀行은 貸出(擔保條件의 隘路 및 信用調查 未備)을 迴避하는 경향을 보여 특히 流通資金의 硬塞을 招來하게 되었다. 通貨改革은 의례히 一時的인 購買力의 全面的인 減退를 수반하나, 이는 心理的인 衝擊이어서 비교적 短時日內에 回復될 수 있는 性質의 것이었고 또 實際가 그러하였지만 流通部門의 硬塞은 실로 문제였다. 그러나 解放以後 廢止되었던 商業어음制度의 復活에 대한 一般의 認識이 同年 7月初旬부터 일반화하여 많이 利用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封鎖預金의 全面解除에 의하여 完全失敗로 돌아가기 直前인 7月 10日項에는 流通部門의 硬化가 크게 緩和되기 시작하였다. 그 뿐 아니라 7月로 접어들면서 부터 銀行預金(要求拂預金 定期預金)도 增加一路에 있어 銀行의 公信用은 완전히 回復되었던 것이다.

印度나 파키스탄의 土地改革의 例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土地改革 高利債整理 및 通貨改革등은 그 利害關係가 가장 큰 既存 經濟勢力層

의 反撥이 크다는 것은 豫測할 수 있는 일이다. 더구나 지난 通貨改革은 그 자체보다도 通貨改革에 의한 封鎖預金과 產業銀行의 既貸出額을 株式으로 還收하여 工業化의 開拓者의 役割을 담당시키기 위해 胎動중이던 產業開發公社案에 대하여 低利融資를 唯一의 資本調達手段으로 삼아온 既存 經濟勢力層의 反撥은 더욱 클 수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既存社會勢力層의 目前的 利益을 代辯하는 輿論이 得勢하는 社會의 與件下에서는 이와같은 劃紀의 措置에 대한 反撥은 더욱 크다.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이 모든 原因이 韓國에서도 例外없이 強力하게 작용하였지만 적어도 通貨改革 그 자체가 이처럼 悲慘한 失敗로 돌아가야 할 經濟的 要因은 결코 없었던 것이다.

(c) 株式의 公開과 證券市場

土地兼併 및 高利貸性向을 產業利潤을 기반으로 하는 近代의 蓄積性向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앞에서 論及한 劃紀의인 措置가 필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한 措置는 하나의 衝擊과 轉換點을 이루기는 하겠지만, 蓄積性向의 近代化에 필요한 制度的 基盤을 가추지 못하고서는 持續의 性格을 띠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비록 制度的 基盤을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措置가 없이는 制度的 改善이 올바른 軌道에 오르지 못한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兩者는 相互補完함으로써만 速成工業化를 뒷받침할 수 있는 蓄積性向의 近代化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에 필요한 制度的 基盤은 非生産的 投資性向을 가지는 貨幣資本을 產業資本으로 轉換시킬 수 있는 經濟機構를 필요로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證券市場의 育成이다. 證券市場은 資本主義社會에서 株式資本調達을 위한 代表的 經濟機構이다. 原始蓄積過程의 歷史가 짧고 따라서 現代企業을 個人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個人本位의 蓄積이 先行하지 못한 후진국에서는 처음부터 零細資本의 協同 즉 株式資本의 調達이 가장 効率의 方法으로 등장 한다. 株式會社制度가 먼저 發達하고 株式資本의 調達過程에서 中樞의 역할을 하게 되는 銀行資本에 의한 產業의 支配가 선진국이었던 英國보다 후진국이던 獨逸과 美國

에서 먼저 나타난 사실은 이러한 후진적 經濟與件에 基因한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후진국에 있어서의 產業資本調達은 證券市場의 育成 및 正常化가 先行되어야 한다.

그런데 證券市場의 育成은 既存企業이나 앞으로 創業될 企業의 株式公開을 必要條件으로 한다. 株式의 公開가 없는 社會의 證券市場은 賭博場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며 따라서 富의 再分配乃至 非生産的 投資를 促進시키는 反社會的 經濟機構로 轉落하고 말 可能性이 있다. 물론 證券市場은 投機의 性格을 띠지 않을 수 없는 것이나 그 本質은 어디까지나 產業資本의 調達機構인 것이다. 따라서 만일 主要 生産企業이 여전히 家族會社形態를 固守하는限 證券市場을 통하여 產業資金이 調達될 可能性은 없게 된다.

이와같은 事情은 昨今の 우리나라 證券市場을 觀察하면 명백해 진다. 우리나라는 현재 約 600의 法人企業體가 있다고 하나 證券市場에 上場된 株式은 6個의 銀行株와 2·3個의 半國營企業體 및 數個의 保險會社만이다. 絕對多數의 企業이 法的으로는 株式會社形態이나 사실상은 대부분이 家族會社에 불과하다. 따라서 證券去來所의 去來의 거의 90퍼센트는 證券去來所株 및 證券金融會社株에 集中되고 있다. 證券去來所株 및 證券金融株의 株價는 證券去來額과 函數的 關係를 갖는다. 去來量이 많아지면 去來所의 收益이 많아지고 또한 證券金融이 增大함으로 證券金融會社의 收益이 오른다. 따라서 去來所株 및 證券金融株에 대한 投機가 尤甚해지면 尤甚해 질수록 이들 두개의 株價는 上昇乃至 激動하고 나아가서는 완전히 賭博市場化하고 말 與件은 굳어지게 마련이다. 去來所 및 證券金融會社의 株式을 중심으로 한 證券去來가 증대한다고 해서 產業資金이 調達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웃지 못할 證券去來現況의 근본 원인은 株式의 公開가 없고 民間企業이 證券市場을 통해 株式資本을 조달하느니 보다는 財政資金의 低利融資를 받아 현재의 獨占의 家族會社體制를 持續시키려는 意慾이 強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찌서 株式資本을 조달하려는 意慾이 없을 것인가? 첫째는 協同에 대한 經驗의 不足이다. 이러한 經驗의 不足은 法人體內에서의 排

他的 行動과 一個人에 의한 全企業의 支配慾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法人企業이 正常化되지 못하는 企業家側의 代表的 見解이다. 둘째 理由는 企業經理의 非正常的 形態이다. 흔히 후진국에서 甲富가 되는 길은 脫稅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들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二重帳簿가 필요하게 되고 따라서 企業의 收益이 公開될 理 없다. 더구나 企業이 政治와 結托하여 政治資金의 供給源이 되고 보면 더욱 經理를 公開할수 없고 公表되는 利潤은 언제나 보잘것 없거나 赤字이다. 그래서 一般大衆은 株式參與를 하지 않을 것이며 利潤配當率이 낮은 株式의 買入을 斷念하게 된다. 따라서 오히려 收益率이 높은 高利貸아니면, 奢侈品 消費를 하게 마련이다. 셋째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력한 理由는 證券市場에서 株式資本을 調達하기 보다는 더욱 低率인 財政資金을 產業銀行을 통해 融資받는 것이 有利하다는 사실에 있다. 高利貸가 月五分인데 비해 年八分의 低利子率과 長期貸付라는 有利한 條件이 있고 年 20乃至 25퍼센트의 物價上昇率을 고려하면, 상당한 附帶費用 및 政治資金의 提供등을 생각하더라도 사실상 공짜나 마찬가지이다. 이와같은 韓國의 特殊事情이 이 나라의 家族會社體制와 腐敗 및 不正의 溫床을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特殊與件을 근본적으로 是正하지 않고서는 家族會社制度를 打破할 수 없고, 또 家族會社를 打破하지 못하는 限 證券市場 나아가서는 資本調達機構 그 자체를 確立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적어도 현재까지 着手된 第1次 5個年計劃의 主要計劃事業도 이러한 點을 근본적으로 是正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 않다.

(d) 後進國의 混合經濟體制下의 資本調達機構

그러면 株式公開와 證券市場만 確立되면 工業化에 필요한 自動的 資本調達機構가 형성될 것인가 하면 그렇지도 못하다. 앞에서 지적한 첫째 및 둘째의 理由 때문에 株式公開와 證券市場만으로는 不足하다. 그뿐 아니라 經營知識 및 技術不足을 補完하고 可用資源의 範疇안에서 戰略的인 投資序列을 劃定하기 위해서는 政府의 指導를 받는 經濟機構가 開拓者의 役割을 담당해야 한다.

東南亞의 몇몇 國家에서 成功的인 先例를 보여 주고 있는 「産業開發公社」는 이러한 役割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産業開發公社는 첫째로 民間零細資本 및 政府財政資金을 「플」化하여 이를 傘下 戰略事業에 株式投資함으로써 協同에 대한 經驗不足에서 오는 法人企業 不振의 隘路를 打開할 수 있다. 둘째로 傘下企業에 投資한 株式資本을 證券市場을 통해 賣却함으로써 證券市場을 실질적으로 產業資本調達機構로 만들수 있는 동시에 施設資本의 廻轉率을 높일 수 있다. 셋째로 雇傭重役의 派遣 및 技術者의 共同利用으로 經營 및 技術에 관한 새로운 知識을 導入할 수 있을뿐 아니라, 資本과 經營을 分離함으로써 家族會社의 打破는 물론 企業을 合理化할 수 있다. 넷째로 過去와 같은 特惠融資 아닌 株式投資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腐敗와 不正 그리고 工業을 위해 貸出된 資金이 貿易資金화하는 따위의 資本의 浪費를 防止할 수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資本主義經濟機構가 형성되지 못한 후진국에서는 經濟開發上 政府의 主體的 役割을 是認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完全한 自由放任이 아닌 混合經濟體制를 생각하는 限 그것에 適合한 資本調達機構를 가져야만 한다. 株式公開와 證券市場 그리고 정상적인 金融體系가 資本主義의 經濟機構를 의미한다면 資本調達機構로서의 産業開發公社는 後進의 性格을 克服하기 위한 補完機構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종류의 經濟機構를 가짐으로써 混合經濟體制는 제대로의 能率的인 資本調達が 가능할 것이다. (註12)

3. 追加貯蓄의 生産의 調達—政策의 問題

追加貯蓄을 產業資本으로 誘導하자면 첫째로 年々の 國民所得 중 보다 많은 몫을 貯蓄케 하는

(註12) 産業開發公社는 비단 資本調達機能만을 갖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本質을 資本配分機構임에 틀림없다. 다만 여기서는 資本調達機構에 局限해서 말했을 뿐이다. 그리고 産業開發公社만으로 混合經濟的 補完機構가 完備되는 것도 물론 아니다. 가령 農業 水産業 中小企業 海外貿易 등 各經濟部門에 따라 그것을 補完하는 機構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農協, 水協, 中小企業協同組合, 輸出公社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製造業중 大企業의 資本調達에 관한 補完機能만을 문제 삼았다.

限界貯蓄性向이 문제가 되고, 둘째로는 그러한追加貯蓄중에서 그 대부분을生産的 投下, 즉 실질적으로 資本形成에 寄與하겠끔 政策的으로 誘導하여야 한다. 선진경제에서는 대체로 限界貯蓄性向의 문제만이 分析 및 政策的 課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에서는 限界分析과 단순한 貨幣量의 政策的 調節로서 나타난다. 그리고 그 貨幣量의 調節도 限界貯蓄性向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이를 低下케 하는 資本過剩國家로서의 政策的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후진경제에서는 叙上한 바와 같은 非生産的 蓄積性向의 止揚이라는 制度改善의 問題는 물론, 追加貯蓄의 많은 부분을 非生産的 投下傾向으로 부터 産業資本化하는 方向으로 資本循環過程 그자체를 是正하는 構造的 變革이 더욱 문제된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이다. 따라서 國民所得中 보다 많은 몫을 貯蓄케 하는 限界貯蓄性向의 문제는 사실상 후진경제에서는 副次的 政策課題 밖에 되지 않는다. 이리하여 限界分析과 단순한 貨幣量의 政策은 그 適用領域이 극히 좁다. 「케인즈」의 分析方法이 후진경제에 適合하지 않다는 Robinson 女史의 見解는 穩當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삼고 있는 追加貯蓄의 生産的 調節을 위한 政策的 課題는 이미 우리가 基本定理을 定立하는 마당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粗現實貯蓄率로부터 「마이너스」의 貯蓄率을 控除한 純現實貯蓄率과 社會的 可能貯蓄率간의 乖離라는 후진국적인 기본적 不均衡 즉, $(A_{s,r} - N_{s,r}) < S_{p,r}$ 를 均衡케 하는 「政策的 問題」에 해당한다. 후진국의 경제성장이 본질적으로 構造的 變化에 그 특징이 있고, 따라서 資本調達에 있어서도 叙上한 非生産的 蓄積性向의 近代化라는 「制度改善의 問題」가 보다 중요하며, 그러한 劃期的인 措置없이는 速成工業化에 필요한 産業資本을 조달할 수는 없지만 政策的 問題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工業化에 필요한 貯蓄率을 실질적으로 「維持」乃至 「提高」할수 없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要는 貯蓄率을 非常手段 혹은 命수에 의하여 一時的으로 높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繼續的으로」일정한 貯蓄率(生産的 蓄積性向)을 維持하지 않고서는 工業化過程이 停滯되고 말것이기 때문이다. Rostow 教授가 飛躍을

위한 前提條件의 하나로서 『過渡的 段階의 本질은 投資率 (말하자면 國民所得의 10퍼센트 以上의)이 規則的으로 實質的으로 또 눈에 띄일만큼, 人口成長을 능가하는 水準까지 上昇』(註13)하는데 있다고 지적한 것은 이러한 뜻으로 해석된다.

制度的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資本主義 社會에서는 蓄積動機에 의해서 經濟的 決定이 이루어지는 만큼, 여전히 非生産的 投資가 生産的 投資보다 私의 蓄積動機를 더욱 충족시켜 주는 限産業資本은 조달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社會에서는 貨幣所得의 일시적 成長은 있을 지언정 실질적인 生産力增大는 수반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루고져 하는 「政策的 問題」는 주로 經濟法則 즉 經濟誘因에 입각하는 政策的 課題가 된다. 그 主要課題는 첫째로 前資本主義的인 在庫 및 用役에 대한 投資, 高利貸, 및 不動產投資를 典型的 蓄積手段으로 하는 中産階級에 대한 政策, 둘째로 傳統的인 農業國家인 경우 貯蓄의 主要供給源이 되어야 할 農業의 生産性增大에 관한 政策, 셋째로 耐乏에 根據를 두는 零細資本動員에 관한 政策이다.

(a) 對中産階級政策

주로 印度의 事情을 중심으로 分析한 K.E. Boulding 및 Pritam Singh 兩教授의 최근의 論文에서는 貿易家 商人 및 그밖의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中産階級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中産階級은 經濟成長過程에서 偶發利潤을 포함한 莫大한 利得을 얻는다. 따라서 開發初期에 處해 있는 나라에서는 이 階級이 가장 빠르게 成長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로 富裕階級은 높은 限界直接稅率을 甘受하나 中産階級은 直接稅의 負擔에서 벗어나기가 일수이고, 둘째로 그들의 豊富한 潜在貯蓄은 假飾的인 慾望 (artificial or superfluous wants)의 充足을 위한 높은 消費性向으로 말미암아 霧散되어 버리며 끝으로 結局 그들은 成長過程에서 適切한 貢獻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經濟開發途

(註13) W.W.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A Non-Communist Manifesto*,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李相球 姜命圭共譯 經濟成長의 諸段階 法文社版 P. 46.

위에 있는 社會에서는 中産階級은 가장 많은 利得을 얻으면서도 經濟開發 그 자체에 대해 거의 犧牲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兩教授는 自由放任에 의한 均衡價格構造 (equilibrium price set)를 資源配分の 指針으로 삼는 것이 合理的이라는 新古典派의 態度를 否定하고 經濟開發에 適合한 最適價格構造 (optimal price structure), 즉 二重價格構造를 주장한다. (註14)

그런데 그들은 中産階級의 豊富한 潛在貯蓄이 假飾的 消費, 즉 誘示效果로 나타나는 사실만을 重要視할뿐, 이들 階級의 蓄積性向이, 資本形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潛在資源을 단순한 所得 및 富의 再分配過程을 뜻하는 原始的 蓄積으로 흘러가게 하는, 사실을 度外視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資源의 調達과 그 配分을 同一過程으로 把握하려는 古典派의 價格機構觀에 사로잡혀 후진국적 混合體制에 알맞는 資本調達機構를 문제시 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겠다. 中産階級은 특히 傳統的 社會에서 飛躍段階로 移行하려는 過渡期에 있어 誘示效果에 基因하는 潛在資源의 消費뿐만 아니라 資本蓄積을 위한 그들의 再投資 그 자체도 非生産的 投資가 典型的이라는 점에서 經濟開發에 寄與하는 바가 적은 것이다. 물론 經濟規模가 확대됨에 따라 商業 및 用役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실, 즉 生産과 流通이 函數的 關係를 갖는다는 사실을 否認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中産階級에 의하여 資本主義의 「엔진」이 始動된다는 사실도 否定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한 流通過程의 延長, 말하자면 産業利潤과 消費者厚生을 中間搾取하는 것이 后進국의 典型的 蓄積手段이라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工業을 위해서 融資된 財政資金이 貿易業 및 用役으로 逃避하고, 中小商人 高利貸 金業者 및 用役業의 收益이 土地兼併으로 흘러가는 韓國의 特殊事情아래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對中産階級政策은, 첫째로 制度의 改善은 물론 수반되어야 하지만, 蓄積動機=經濟誘因 그 자체에 呼訴하여 이러한 非生産的 蓄積性向을 生

産의 蓄積性向으로 轉換케 하는 政策的 課題가 있고, 둘째로 Boulding 및 Singh 教授가 지적한 바와 같이 潛在貯蓄이 消費로 흘러가는 誘示效果를 防止하는 政策的 課題가 있다.

첫째로 非生産的 投機性向을 防止하기 위해서는 工業에의 生産的 投資가 그러한 非生産的 投資보다 더욱 有利하게 될 경제적 與件을 마련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經濟誘因에 呼訴하여 中産層의 投機性向을 産業에의 投資性向으로 돌려야 한다. 그 具體的 政策的 일부로서 租稅政策 價格政策 및 社會間接資本의 造成등을 들 수 있다.

租稅政策은 營業稅 및 所得稅의 差別課稅와 奢侈性 完製品 및 半製品 등에 대한 高率의 物品稅 및 關稅를 들 수 있고, 不動產投機 및 高利貸에 대해서는 高率의 資本利得稅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非生産的 活動의 純收益率을 낮추고 生産的 活動의 純收益率을 相對的으로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戰略産業에 대해서는 租稅特惠를 附與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措置가 과거 우리나라에서 實證하였듯이 高利貸의 陰性化 및 그밖의 暗去來 乃至 脫稅行爲를 誘發할 뿐 아니라 資金環還過程에 硬化現象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非合法的 行爲의 防止를 위한 行政力의 強化 및 硬化現象을 冒免할 수 있는 金融體系의 正常化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價格政策으로서는 電力 電話 水道 및 鐵道 등 公益事業의 料金を 差別待遇하는 二重價格體系를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電力料金の 例를 들어 보면, 原價主義에 입각하는 나머지 中小企業의 小動力料금이 大企業의 大動力料金보다 비싸다. 뿐만 아니라 非生産的 活動部門에 대해 전혀 差別料金を 부과하지 않는 것 같다. 과거의 實例로는 交通事業을 合理化한다는 名目아래 鐵道料金에 있어 旅客運賃보다 오히려 貨物運賃을 올리는 傾向이 있었다. 이는 마치 第4共和國以前的 佛蘭西의 租稅體系가 法人稅 爲主로 되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非合理性을 갖는다. 말하자면 最終消費者의 直接負擔이 增加하면 國民의 輿論이 나빠지기 때문이었다. 政治的 雰圍氣와 行政力이 이처럼 脆弱해서는 여하한 對策도 成功을 期

(註14) K. E. Boulding & Pritam Singh, The Role of the Price Structure in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Vol. LIII, May 1962.

約할 수 없다.

끝으로 만일 선진국처럼 현대적 經濟基盤이 갖추어져 있다면 社會間接資本의 造成만으로 產業은 확대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후진국에서는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社會間接資本의 造成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工業立地造成——中小企業을 위해서는 中小企業團地造成——工業用水 電力 및 輸送이다. 그러나 間接資本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叙上한 差別的 價格政策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生産者 負擔의 輕減이 非生産的 活動部門이나 消費者에게 轉嫁됨으로써 公平의 原理에 抵觸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工業化와 雇傭增大가 가능하다면, 보다 큰 社會的 利益이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經濟誘因의 造成은 追加貯蓄을 生産的으로 吸收하여 非生産的 活動 爲主의 傳統的 社會가 生産活動 爲主의 近代社會로 移行하는데 필요한 貯蓄率을 持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社會的 蓄積性向은 아무리 近代的 制度가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經濟誘因만으로 一朝一夕에 變形될 理없다. 그러므로 貿易業者 商人 및 用役業者들로 하여금 그들의 活動舞臺를 工業으로 전환하게끔 直接的인 衝擊을 줄 필요가 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가장 收益率이 높고 따라서 상당한 私的蓄積이 이루어지고 있는 集團, 즉 劇場協會 料食業團體 및 市場商人團體 등에게 第1次 5個年計劃에 策定되어 있는 主要計劃事業을 配定한다면 현재의 그들의 資本力과 앞으로의 貯蓄能力만으로도 內資調達問題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註15) 다만 技術 및 經營知識이 문제될 것이나, 후진국에서는 政府가 이 分野에서 積極的인 역할을 할 필요를 느낀다. 그리고 計劃事業의 이러한 配定과 더불어 그들에게 租稅特惠가 아울러 고려된다면 실질적인 效果를

(註15) 租稅賦課에 이어 收益의 自進申告가 없고 또 그 申告가 있다 하더라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實情인즉 이들 非生産的 活動部門의 收益率을 精確히 算定할 아무런 根據가 없다. 그러나 企業集中傾向으로 그 傾向을 推定할 수는 있다. 劇場, 茶房, 飲食店 및 各種 都賣商은 同一人 혹은 同資本系統에 의한 集中化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가령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劇場을 例로 들면 불과 몇사람의 資本에 의하여 支配되고 있다.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후진국에서는 무엇보다도 企業家의 大量輩出이 緊要한 문제인만큼 少數의 既存企業家를 중심으로 5個年計劃事業을 配定한다는 것은 資本調達에 있어서나 企業家職의 養成에 있어서나 再考할 문제이며, 또한 資本과 經營의 分離 및 株式公開는 企業의 合理化를 위해 더욱 緊急한 문제이다. (註16)

둘째로 中産階級の 潛在貯蓄을 줄먹는 소위 競爭的 消費에 대한 防止策이다. 이러한 誇示效果는 愛國心에 呼訴하는 勸誘나 經濟誘因 등으로는 防止할 수 없다. 따라서 租稅에 의하여 政府貯蓄으로 吸收하고 이를 戰略産業에 投資하는 길 밖에 없다. 19世紀의 民族主義 혹은 「푸로메스탄리즘」과 같은 生活倫理가 이땅에 復活하거나 適應되지 않는 限 사실상 自發的 貯蓄을 期待할 수 없기 때문이다. 中産階級の 競爭的 消費는 먼저 外來奢侈品의 輸入需要를 증대케 한다. 사실상 우리나라에 대한 美援助는 이렇게 浪費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外換資源이 不足한 나라라면 禁止의 高率關稅 및 量的 輸入統制가 필요하다. 그리고 國內生産品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潛在貯蓄을 動員하기 위해서는 奢侈品에 대한 高率의 物品稅를 賦課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稅收入은 곧 政府貯蓄의 增大를 가져오며, 財政投資資源을 豊富하게 한다. 外來奢侈品需要를 抑制할 때 이를 완전히 禁止하느냐, 혹은 高率의 累進的 關稅를 賦課하느냐, 이를테면 量的統制이나 價格機構를 통한 統制이나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다. 그러나 적어도 國內에서 輸入代替가 가능하든가 거의 不必要한 奢侈品의 경우라면 量的統制가 有利할 것이다. 왜냐하면 輸入을 禁止하더라도 輸入關稅에 의하여 調達된 資本을 國內物品稅에 의하여 調達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

(註16) 후진국에 있어서의 企業家職의 養成은 中産階級 특히 貨幣資本의 運營에 訓練이 되어있는 貿易業者 및 商人層에 의존하는 것이 正常的이다. 手工業者나 그 밖의 家族單位의 小經營家들이 現代的 產業家(industrialist)로 발전하는 일은 드문 일이다. 「파키스탄」에서는 「모스림」敎 특유의 準「카스트」(quasi-caste)인 商人共同體(trading communities)가 現代的 產業家로 登場하고 있다. Gustav F. Papanek,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ship,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Vol. LII, May 1962.

이 雇傭面에서도 有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兩者를 兼하는 것이 無理가 없을 것이다.

(b) 農業生産性的 增大

全人口의 70퍼센트에 가까운 人口가 農業에 종사하고 GNP의 35퍼센트가 農業所得(註17)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서 貯蓄供給源으로서의 農業이 얼마나 큰 比重을 차지하는가는 不問可知이다. 農業國家가 工業化하자면, 그 資源을 農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經濟體制如何를 막론하고 하나의 주어진 命題가 아닐 수 없다. 共產諸國에 있어서의 集團農場 혹은 人民公社의 供出機構는 사실상 하나의 社會主義的 資本調達機構로 볼수 있다.

Nurkse教授는 실질적으로 自發的 貯蓄이 가능한 것은 「都市의 商人階級」만이나, 農村에 있어서의 「擬裝失業狀態는 擬裝貯蓄潜在力」(註18)을 의미하는 만큼 擬裝失業을 工業에 吸收하게 되면 現在의 消費水準을 低下시키지 않고서도 貯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擬裝貯蓄潜在力을 動員한다는 것이 Nurkse教授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農業의 生産性 向上없이 工業化過程이 中斷된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1960年을 前後한 東歐共產諸國의 새로운 長期計劃이 종래의 工業爲主에서 農業으로 資源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成長率의 減退를 가져오게 된 理由도 여기에 있다. 東歐에서 이러한 情況이 나타난 것은 이미 1955年頃부터이며 「유고스라비아」가 農業生産性을 높이기 위해 集團農場의 一部를 解體하여 自作農으로 전환시킨 것도 이 때 부터이다. 그리고 戰前까지의 朝鮮의 工業成長 裡面에는 얼마나 甚한 農民收奪이 恣行되었던가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註19)

(註17) 農業所得이 GNP에서 占하는 比重이 이처럼 낮은 것은 美剩餘農産物의 導入 및 歷代內閣의 非正常的 物價政策으로 말미암아 製造品對 農産物의 交易條件이 不當하게 乖離된데 그 原因이 있다.

(註18) R. Nurkse,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ies (朴東燮譯) pp. 58~59

(註19) 各種 供出과 其他控除額을 除外하면 1938年의 경우 朝鮮農民의 손에 남는 것은 全生産物의 35-39% 穀物은 22%에 不過하였다. Ralph H. Blodgett, Comparative Economic System, The Macmillan Co., New York, 1949. P. 249.

農業의 潛在貯蓄을 動원하기 위해서는 農業生産性을 提高하여 農産物의 商品化率을 높이는 데 있다. 그리고 商品化率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程度 强制貯蓄을 强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農業生産性的 提高는 技術改善 協同組合活動등이 더욱 중요한 일이지는 하지만 農産物價格을 통해 그들의 採算을 맞게 해줌으로써 生産意慾을 돋구는데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解放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農産物價格을 不當히 抑制함으로써 物價騰貴率을 操作하여 왔다. 그리고 農産物價格을 抑制할 수 있었던 실질적 要因은 美剩餘農産物의 大量導入이었다. 이리하여 剩餘農産物은 餓死를 冒免케 했지만 그 동안 莫大한 農業補助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農業生産性은 크게 減退하였다. 이를 解放前과 比較하면 다음 表와 같다. (註20) 이리하여 1960年度의

農産物生産指數

品目	1936~40 平均	1960
米 穀	100	99.2
麥 類	100	76.0
雜 穀	100	39.8
豆 類	100	66.3

農業에 대한 各種 補助金 및 融資는 거의 90億원에 달하였으며, 이 때문에 通貨量이 거의 3分之1이나 增加하고서야 겨우 農業이 採算을 match程度의 惡循環을 되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剩餘農産物의 販賣代錢으로 상당한 額의 內資調達이 가능한 것 같지만 正常的인 「베이스」에서 생각하는 限 政府는 年 50億원 程度의 農業補助를 하지 않을 수 없는만큼 內資調達에는 거의 實益이 없는 셈이다.

여하튼 現在 10퍼센트라는 낮은 農業의 商品化率을 급속히 提高하지 않고서는 貯蓄供給은 물론 農村購買力의 減少로 말미암아 全般的 經濟沈滯을 克服할 수 없는 處地에 있을뿐더러 二重社會의 性格을 더욱 深化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現下의 實情으로서는 첫째로 農産物의 交易條件을 改善하는 物價體系 그 자체의 是正이 時急하며 종래 政府에 대한 補助金 依存傾向을 脫

(註20) 趙東弼, 後進國과 經濟自立, 韓國經濟誌 1962年 10月號

피케 하는데 政策的 重點을 두어야 하겠다. 農業에 대한 補助가 年間 50億원에 달하고서야 工業化에 필요한 內資를 조달할 길이 없다. 둘째로 營農資金の 融資 및 補助 위주의 政策을 止揚하고 協同組合 中心의 自發的 活動과 技術指導 등 農經營을 重視하는 政策的 轉換이 있어야 하겠다. 農村振興은 資金の 補助보다는 「리더십」이 더욱 중요하다.

(c) 零細貯蓄——國債是非論

中産階級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했거나 이階級の 誇示的 消費가 현저한 후진국에 있어서는 強制貯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強制貯蓄은 家計의 消費支出를 抑制하는데서 派生되는 零細資금이 主要對象이 되어야 한다. 1867년의 明治維新에서 시작된 日本의 工業化가 國民의 勤勉과 愛國心を 基盤으로 한 零細資금이 큰 역할을 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주로 郵便貯金 및 簡易生命保險 등으로 動員된 이들 資금이 商業銀行 全體의 定着性預金を 凌駕한 사실은 工業 및 社會間接資本 建設에 이들 零細資금이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한 것인가를 推測할 수 있다.

후진국 政府는 흔히 零細貯蓄을 動員함에 있어 國債 혹은 債券發行에 의존하는 傾向이 있다. 그러나 工業化過程은 보통 「인플레이」를 수반하며 또한 國債利子는 市中利子에 비해 보잘 것 없을 뿐 아니라 事實上 物價騰貴率을 下廻하기가 일수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經驗을 보면 國債는 發行되자마자 市中에 出廻하여 그 價格은 보통 額面의 5分之1 以下였다. 말하자면 國債의 發行은 高利貸金業者의 投機對象이 되어 動員 가능한 民間資本으로 하여금 投機로 흐르게 하는 結果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強制貯蓄을 통해 國民은 國債를 買入했지만, 實質價值的 保存은 姑捨하고 거의 완전히 租稅나 다른없는 收奪狀에 되지 않았다. 이리하여 國債나 債券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후진국에서 國民에게 人氣가 없다. 그리고 國債發行을 통해 資금이 調達되고 그것이 一部 企業家에게 低利로 貸付되어 工業이 建設되었다 하더라도 그 果實은 強制貯蓄을 한 國民에게 돌아오지 않고 特殊層인 이들 企業家에게 歸屬한다. 이를테면 政府를 媒介로 하는 貸民으로부터 富裕層으로의 富의 再分配 밖이 되

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腐敗와 不正蓄財의 溫床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亦是 國民에게 人氣가 없겠지만, 零細貯蓄者에 대해 5年計劃事業의 株券을 交付하는 方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株券에 대해서는 政府가 最低配當率을 保證할 필요가 있다. 株券을 交付하면 「인플레이」 損失을 防止할 수 있을 것이고 最低配當率을 保證함으로써 株價의 큰 變動을 防止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措置를 강구하자면 이를 媒介하고 全體의 採算을 맞출 수 있는 資本의 調達 및 配分을 綜合的으로 管掌하는 機構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投資의 懷妊期間에는 建設利子를 認定함으로써 이러한 經濟機構는 採算을 맞출 수 있게 될 것이다. 數個國家에서 先例를 보여주고 있는 產業開發公社는 이러한 經濟機構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4. 結 論

以上에서 叙述한바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資本主義的 經濟基盤이 확립된 선진경제에서는 資本의 調達과 配分이 不可分離의 單一過程으로서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調達된 資本은 대체로 선진경제적 의미에 있어서의 生産的 産業에 投下된다. 그리고 그것은 價格의 媒介機能에 의하여 誘導되는 하나의 自動的 過程으로 나타난다. 다만 動態的 過程에서 나타나는 선진국적인 基本的 不均衡을 조정하기 위해 政府의 補完的 政策이 필요한 것이나, 다만 貨幣量의 操作이 주가 되는 선진국적 混合經濟體制를 특징으로 한다. (註21)

그러나 후진국의 사정은 다르다. 첫째 資本調達過程과 資本配分過程은 대체로 獨立된 動機에 의하여 進行된다. 말하자면 資本의 調達は 全部가 A. Smith나 F. List의 概念에 符合하는 生産的 産業에 投資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原始的 蓄積을 典型的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動態過

(註21) 生産에 관한 선진경제적 定義는 他人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모든 經濟活動을 말한다. 따라서 후진국에 適合한 Smith의 「useful labour」라는 概念은 없어진단다.

程에 있어서의 기본적 不均衡도 그 性格이 判異하다. 말하자면 선진국의 기본적 不均衡은 保證成長率과 自然成長率의 乖離에 由來하는 「慢性的 失業問題」와 現實成長率과 保證成長率간의 乖離에 由來하는 「景氣循環의 問題」이지만, 후진국의 기본적 不均衡은 現實資本形成率과 純現實貯蓄率간의 乖離의 是正을 목적으로 하는 「制度改善의 問題」와 純現實貯蓄率과 社會的 可能貯蓄率간의 乖離의 是正을 목적으로 하는 「政策의 問題」이다.

制度改善의 問題는 자본주의적 經濟基盤의 未成熟에 由來하는 原始的 蓄積性向을 産業利潤을 基盤으로 하는 近代的 蓄積性向으로 전환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말하자면 蓄積性向의 近代化를 통해 現實資本形成率을 純現實貯蓄率水準까지 提高하는 것이므로 國民의 追加的 耐乏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첫째로 土地改革 및 高利債의 整理등 非常手段에 의하여 劃紀의인 歷史的 轉換點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둘째로는 資本主義的 資本調達機構인 證券市場의 形成,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그 先行條件으로서 株式의 公開가 요청되며 세계로 未熟한 資本主義的 經濟機構를 補完할 수 있는 綜合的인 補完機構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資本主義 本來의 經濟機構와 후진국의 體質에 알맞는 補完機構(例 産業開發公社등)를 가짐으로서 비로소 후진국은 能率的인 混合經濟的 資本調達機構를 갖게 된다.

政策의 問題는 주로 經濟誘因에 呼訴하여 現實貯蓄率을 높혀 社會的 可能貯蓄率까지 끌어올리는, 國民의 追加的 耐乏을 수반하는 追加貯蓄의 産業資本化 문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非生産的 活動部門의 收益率을 낮추고 生産的 活動部門의 收益率을 相對的으로 높이는 租稅政策 및 二重價格政策 그밖의 補助로써 中産階級의 投資를 工業投資로 誘致하는 동시에 誇示效果를 防止함으로써 그들의 潛在貯蓄이 消費로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對策이다. 다음으로 農業生産性의 提高는 工業化過程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實情으로서는 交易條件의 改善을 目標로 하는 農産物價格政策과 營農方法의 改善 및 協同組合活動을 통한 生産意慾을 들구는 것이 더

욱 適切하다. 끝으로 消費家計의 耐乏에서 派生되는 零細資本의 動員은 落後된 低所得國家의 경우 無視할 수 없는 資本調達源泉이지만, 國債에 의한 調達은 人氣가 없을 뿐더러 일방적인 犧牲을 강요하는 동시에 高利貸金業者의 投機를 助長한다.

要컨데 混合經濟體制를 갖는 후진국이 오늘날 제대로 經濟的 成果를 나타내지 못하는 理由는 投資計劃이 未備하다든가 資本의 浪費보다도 그 體制에 알맞는 資本調達 및 資本配分機構를 갖지 못한다에 근본원인이 있다. 반대로 社會主義陣營의 후진국이 許多한 隘路를 가지면서도 經濟成長에 있어 그들대로의 軌道에 오르고 있는 理由는 그 體制에 특유한 強制的 資本調達機構가 있기 때문이다. (註22) 따라서 무엇보다도 선진국의 그것이 아닌 후진국적 混合經濟體制에 알맞는 資本調達機構의 확립, 즉 「制度改善의 問題」가 가장 時急한 課題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制度的 改善」에 대해서는 既存經濟 勢力層의 反撥이 크다. 그리고 이들 勢力層이 후진국의 政治勢力의 基盤이 되어 있는 만큼 制度的 改善은 확실히 어려운 社會的 課題가 아닐 수 없다. 1830年代에 獨逸은 保護主義에 의하여 오늘날의 「라인」江의 奇蹟을 펼친 凌駕하는 經濟的 成果를 爭取했지만 그 保護主義政策을 政府가 일시적으로 拋棄하지 않을 수 없었던 理由는 당시의 經濟勢力層을 이루고 있었던 「용커」나 強力한 商人同盟의 反撥에 있었던 것이다. (註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難關을 克服하지 않고서는 후진국의 經濟成長을 期待할 수 없다는 것도 또한 眞理이다.

(註22) 社會主義的 資本調達機構는 農産物의 強制供出을 容易하게 하는 集團農場 혹은 人民公社制度和 消費節約을 強要하는 高率의 物品稅中心의 豫算制度를 특징으로 한다. 戰前의 소련의 例를 보면, 農産物의 供出은 全生産物의 61~65퍼센트 (公開市場價格의 約 25퍼센트 價格으로 政府買上)에 달하며, 物品稅에 의한 稅收入은 聯邦豫算의 71.4퍼센트에 달하며, 物品稅率은 小賣에 있어 15~90퍼센트 都賣에 있어 58.6퍼센트에 달한다.

Ralph H. Blodgett, Comparative Economic System, New York, 1949. pp. 247~250. 및 pp. 355~356.

(註23) F. List, Das nationale System der politischen Oekonomie, Gona, 1922. pp. 499-506.

(筆者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副教授)